

리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정지원 국제협력정책실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jjung@kiep.go.kr, Tel: 044-414-1182)
- 문진영 국제협력정책실 협력정책팀 부연구위원
(jymoon@kiep.go.kr, Tel: 044-414-1274)

차 례 ●●●

1. 배경
2. 신기후체제 협상 경과
3. 기후재원 관련 주요 논의
4. 시사점

주요 내용 ●●●

- ▶ 2011년 더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설립에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신기후체제 설계를 위한 작업그룹이 구성되어 이번 리마 당사국총회까지 2015년 합의문의 초안 도출을 목표로 당사국간 협상이 진행되어 왔음.
- ▶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채택을 앞두고, 이번 총회에서 협약의 기본 원칙 반영, 기여(INDC)의 범위와 제출 시기 및 정보, Pre-2020 공약 이행 등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채, 막을 내림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 주요국은 2015년 상반기까지 자국의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에 조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산업여건을 감안하되, 온실가스 배출 수준 및 경제적 위상, 공약 후퇴 방지(no backsliding) 원칙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감축목표 수립이 시급함.
- ▶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을 위한 기후재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바, 100억 달러 규모의 GCF 초기 자원 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규재원 보충방식에 대한 논의 진전이 중요한 것으로 평가됨.
 - 선진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공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이 의미있는 감축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

1. 배경

■ 2011년 더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7)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설립에 합의하였음.

- 이에 따라 신기후체제 설계를 위한 작업그룹(ADP: Ad-hoc working group on Durban Platform)이 구성되어 2014년 당사국총회(COP20)까지 2015년 합의문의 초안 도출을 목표로 당사국간 협상이 진행 되어 왔음.
-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는 의정서(protocol) 또는 법적 효력을 갖춘 또 다른 형태의 문서가 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합의에 포함될 요소는 감축, 적응, 자원·기술이전·능력배양,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임.

- 2020년 이후 개도국의 실질적인 감축 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진국의 자원, 기술이전, 능력배양에 관한 지원이 신기후체제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은 장기 지원목표(2020년 연간 1,000억 달러)의 달성 경로 및 중간목표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감축 노력을 강조

■ 2013년 바르샤바 당사국총회는 2015년 합의 도출 과정의 일환으로 각국이 정한 기여(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수준을 2015년 당사국총회(COP21) 이전까지 제출하기로 결정

- INDCs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일 년 내내 제출되었으며, ADP 공동의장이 마련한 회의 문서들(reflection note, non-paper)을 토대로 2014년 세 차례 ADP 회의와 리마 당사국총회 협상이 진행되었음.
- 기후재원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이 INDCs 요소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2020년 기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재원 조성 목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음.
- 개도국은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목표 도입 및 자원 확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음.

■ 2015년 당사국총회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채택을 앞두고, 2014. 12. 1 ~ 12. 13일까지 페루 리마(Lima)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는(COP20)는¹⁾ 주요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음.

- 본고에서는 2014년도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 경과, 리마 당사국총회의 주요 이슈 및 합의사항 등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제20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와 제10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가 동시에 개최됨.

2. 신기후체제 협상 경과

가. 2014년 주요 논의

■ 2014년 협상은 INDCs에 포함될 항목과 항목별로 제출해야 할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으나, 주요국간 참여한 입장 대립으로 리마 당사국총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됨.

- 선진국은 INDCs는 감축에 관한 사항이라는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감축 이외에 적응과 재정지원 등 나머지 2015 합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개도국의 입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INDCs에 포함되어 개도국은 적응 관련 수요(needs)를 제시하고 선진국은 적응 관련 지원계획을 INDCs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INDCs 정보 제출과 관련, 선진국은 선진·개도국 공히 동일한 정보 제출을 요구한 반면, 개도국은 정보의 차별화를 주장

■ 개도국은 협약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주요 조항을 신기후체제 논의의 준거로 제시한 데 반해, 선진국은 협약 채택 이후 변화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조

- 개도국은 협약 “공통의 그러나 차별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형평성(equity)을 강조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나누는 부속서 체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진화하는 CBDR과 각국의 역량(respective capabilities)을 강조하는 한편 이분법적 국가 구분에 반대함.

■ 개도국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성공의 선결조건은 Pre-2020 공약의 이행임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감축공약 미이행과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불참을 강하게 비판

■ 한편, 2015년 합의에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관련 이슈는 ① 지원에 관한 2015 합의의 성격(legally binding or political), ② 지원의 MRV(measurement, report, and verification of support), ③ Pre-2020 시기 이행수단(MOI) 제공을 Post-2020 지원으로 전환, ④ 자원-기술-능력배양 연계로 정리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원) 공여기반 확대, 공여국간 부담 공유, 적응 지원 및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기후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GCF에 대한 자원 공여
- (기술) 기술 개발 및 이전의 주요 장벽인 지적재산권(IPR)에 관한 국제 메커니즘 구축, GCF에 기술 개발 및 이전 창구 개설
- (역량구축) 역량구축에 관한 별도 합의 채택 vs. 모든 이슈에서 역량구축을 강조, GCF가 지원하고 기술 및 적응 메커니즘과 연계할 수 있는 국제 역량구축 메커니즘 설립

■ 2007년 도출된 발리행동계획의 이행과 관련,²⁾ 개도국은 장기 지원목표 도달을 위한 연간(2014~2019년) 또는 중기(2016년) 목표 수립을 주장

-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각종 합의 이행을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
- 2013년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는 더반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장기 재원에 관한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mes on long-term finance)을 종결하고, 선진국으로 하여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전략과 접근방식에 관한 사항을 격년으로 제출하도록 합의

나. 리마 당사국총회 합의사항

■ 2015년 합의문에 포함될 요소를 이번 당사국총회의 결정문 부속서(annex)로 채택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5월까지 협정문 초안(negotiating text)을 도출할 예정

■ 당사국들은 INDCs 제출시 제공해야 할 정보와 INDCs 검토 방식 및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

- (INDCs 관련 정보) 기준년도, 기간, 범위, 계획과정, 가정, 방법론(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원 산정 방법 등) 등과 함께 자국의 INDCs가 공정하고 야심찬 기여임을 설명하기 위한 정보
- (공약 후퇴방지) 각국이 현재 수준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INDCs 제출
- (INDCs에 적응 포함) 모든 국가가 INDCs 제출시 감축목표뿐만 아니라 국가별 적응 계획 또는 적응관련 기여 내용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고려
- INDCs 제출시 유엔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약 사무국은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된 당사국 INDCs의 총 효과(aggregate effect)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작성

■ 기후재원 관련, 주요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장기 기후재원) 공공재원의 상당부분을 적응 활동 지원에 사용할 것. 2015년 장기 기후재원 연례 워크숍 주제는 적응 지원임.
- (상설위원회) 지원에 대한 MRV 관련 상설위원회의 작업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 2015년 상설위원회 연례 포럼 주제인 산림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 표명
- (GCF) 민간부문기구(private sector facility)의 신속한 운영 촉구. 초기 재원을 활용한 능력배양(readiness and preparatory support)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

2)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장기적인 행동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2007년 당사국총회(COP13)에서 채택된 결과물로서, 이후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후속 결정문이 도출되었음(Decisions 1/CP.18, 2/CP.17, 1/CP.16). 2010-12년 300억 달러 단기재원 조성,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재원 확대,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등이 주요 사항임.

3. 기후재원 관련 주요 논의

가. 장기 기후재원 조성

-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16)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재원을 확대 조성하기로 합의하였음.
- 2013년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 합의에 따라 선진국은 기후재원 확대를 위한 전략 및 접근방식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기후재원에 관한 장관급 대화를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함.
- 개도국은 기존 입장대로 2020년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중기 목표 수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반면, 선진국은 세부 목표 수립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임.
- 선진국은 의미있는 감축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기후재원을 조성할 것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여건조성 역시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리마 당사국총회 결정문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요구를 반영, 선진국으로 하여금 공공 재원의 상당부분을 적응 활동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당사국이 기후재원 조성을 촉진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각국의 여건 마련 및 정책체계 증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시되었음.
- 선진국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격년으로 제출하기로 한 재원증진 전략 및 접근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2016년 제출시 기후재원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조하도록 요구하였음.
- 지난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라 2020년까지 협약 사무국이 주최하기로 한 워크숍(in-session workshops)과 관련, 2015년과 2016년의 주요 주제는 적응에 대한 지원,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과 능력배양 지원(readiness support) 협력, 개도국의 수요 검토 등으로 설정됨.

나. 상설위원회 활동

-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는 2014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리마 당사국총회에 제출하였음.
- 상설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기후재원 현황 및 평가에 대한 첫 격년보고서³⁾가 특히 주목을 받았음.

3) 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flows

■ 상설위원회 격년보고서에 따르면,⁴⁾ 2010년~2012년 중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유입된 기후재원의 규모는 매년 400억 ~7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공공재원은 350억 ~ 500억 달러 수준임.

- 지원 유형은 기후재원의 절반가량이 무상증여로 제공되었으며, 그 밖에 양허성 차관, 기타공적자금, 수출신용 등이 사용되었음.
- 지원 대상별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적응 지원은 최대 24%에 불과

■ 상설위원회는 기후재원 모니터링과 관련 [표 1]과 같은 제약요인을 제시하였음.

- 상설위원회는 ① 기후재원 정의 규정, ② 기후재원 보고 지침 개선, ③ 기후재원의 감축 및 저탄소 개발에 대한 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④ 민간 기후재원 데이터 수집 및 추정방안 논의 등을 당사국총회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제출

표 1. 기후재원 모니터링의 제약요인

제도적·절차적 사항	방법론과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된 기후재원 정의의 부재 ● UNFCCC, 다자개발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 보고방식의 불일치 ● 선진국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격년보고서(biennial report)의 불완전 보고 및 국가간 보고방식의 불일치 ● 개도국이 다자개발은행, 다자기금, NGOs, 민간 등으로 부터 수령한 지원 금액의 보고 관련 지침 부재 ● 국내외 기후재원 흐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개도국의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 및 지역개발은행, 기타 국제금융기구들이 제공하는 기후재원 정보의 상세 내용 부족 ● 분야별 민간재원 데이터 부재 ● 개도국간 자원 흐름 정보 부재

자료: Honkatukia and Nafo(2014, 6), Co-facilitators note on the first biennial assessment and overview of climate finance flows(SCF/2014/7/3).

■ 상설위원회 격년보고서를 당사국총회 합의사항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 선진-개도국이 상이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리마 결정문에는 격년보고서를 주목(take note)하는 수준으로 반영되었음.

- 선진국은 격년보고서에 명시된 기후재원 규모를 결정 문안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개도국은 기후재원 추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자칫 선진국이 장기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반대하였음.
- 개도국은 기후재원 모니터링에 관한 상설위원회의 권고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해당사항은 지원의 MRV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내용으로 간주하고 결정문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

4) UNFCCC(2014), "Report to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FCCC/CP/2014/5. Annex II

다. GCF

- GCF는 2014년 개최된 7차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모델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기금 조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게 되었음.
- 리마 기후재원 고위 장관급 대화(12.9)에서 여러 국가들이 GCF 공여 의사를 추가적으로 표명하였으며, 27개국에서 102억 달러의 기금이 조성된 상태임.
 - 지난 9월 23일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Climax Summit)를 전후로 주요 국가들이 29억 달러의 기금을 GCF에 조성하기로 공약한 바 있음.⁵⁾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온실가스 감축 합의에 이어⁶⁾ 호주 퀸즐랜드대 연설(11.14)에서 GCF에 최대 3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일본 역시 1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GCF 사무총장 Hela Cheikhrouhou는 GCF의 초기 재원 규모를 100억 달러로 예상한 바 있음.
- 리마 당사국총회에서는 GCF 초기 재원 조성에 기여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부속서 1 국가들을 어떻게 결정문안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선진국은 기여 주체에 개도국을 포함하고, 최근의 재원조성 결과에 대해 의욕적이고 시의적절한 기여를 강조한 반면, 개도국은 100억 달러 가까운 GCF의 초기 재원이 조성되었으나 개도국의 수요에 부족하다는 입장과 개도국이 GCF 재원조성의 주체로 명기되는 것을 반대하였음.
 - 결정문에는 시의적절한 재원 조성에 대해 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기여 당사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재원조성에 참여한 모든 국가를 각주로 기술하기로 함.
 - 또한 아직 기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선진국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초기재원 조성 과정에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재정적 참여를 요청하였음.
- 개도국은 GCF의 지원 창구로서 감축과 적응 이외에도 능력배양과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별도의 창구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GCF 사업이 초기 단계인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별도의 창구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음.
 - 당사국총회는 GCF 이사회에 감축과 적응 창구의 운영을 가속화할 것과 능력배양과 기술개발 및 이전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음.

5) 독일과 프랑스 10억 달러, 스웨덴 5억 달러, 한국 및 스위스 1억 달러, 덴마크 7천만 달러, 노르웨이 3,300만 달러, 멕시코 1,000만 달러, 룩셈부르크 680만 달러, 체코 550만 달러

6) 2014년 11월 12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피크에 도달해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하였고,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에서 26~28%를 감축하기로 함.

4. 시사점

-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 채택 목표를 앞두고, 이번 총회에서 협약의 기본 원칙 반영, INDCs의 범위, 제출 시기 및 정보, Pre-2020 공약 이행 등에 대해 선진·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채, 막을 내림에 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도전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 주요국들은 2015년 상반기까지 자국의 능력 및 수준에 부합하며 충분히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에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온실가스 배출 수준 및 경제적 위상, 국내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고, 공약 후퇴 방지(no backsliding) 원칙에 부합하는 감축목표 수립이 시급함.
 - 신기후체제에서 감축목표는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목표 상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순환 구조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축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신기후체제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이 핵심요건이나, 개도국이 제시하는 감축 목표가 충분히 의욕적이고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어야만 선진국 역시 재정지원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음.

 -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선진국의 기후재원 제공은 개도국의 의미있는 감축 행동과 이행의 투명성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합의한 바 있음.
 -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정지원 공약 이행의 구체화 차원에서 중기 목표 도입 및 로드맵 채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며 감축 협상의 진전을 주장하고 있음.
- 장기 기후재원 조성 논의를 위해 지난 바르샤바 당사국총회(COP19)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이행되었으나, 실질적인 논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함.

 - 바르샤바 당사국총회 합의대로 기후재원에 관한 장관급 대화를 개최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각국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무름.
 - 또한 2014년은 선진국이 기후재원 조성 관련 격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첫 해이나, 당사국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전 당사국총회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 곤란
- 상설위원회의 기후재원 흐름에 관한 첫 번째 격년 보고서가 주목을 받았으나, 데이터 출처 및 추적 방식에 대한 한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기후재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부재하고, 다양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기후재원 규모의 추정 범위가 넓었으며, 기관별 기후재원 모니터링 방식이 상이하여 통합 비교분석은 사실상 어려움.
- 기후재원 흐름의 모니터링과 MRV는 재원 흐름과 사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바, 모니터링과 MRV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설위원회의 활동이 기대됨.
- 특히 기후재원 조성 목표가 선진국의 공공재원으로만 달성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재원을 추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

■ UN 기후정상회의, 베를린 공여회의, 기후재원 장관급 대화 등을 통해 GCF가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초기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운영 개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리마 당사국총회에서 나타나듯이, 당사국총회가 운영주체에 대한 지침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GCF 이사회의 기금 운영에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초기 재원은 조성되었으나,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규재원 보충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임.
- 초기 재원 마련으로 GCF 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관기관 공동으로 GCF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도국의 어느 한 쪽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양측 입장을 중재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여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것이 긴요함.

- 리마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환경건전성그룹(FIG)에서 스위스 및 멕시코와 기후재원 의제에 관한 입장을 공유하고, 그 일부를 합의문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둬.
- 쟁점분석과 논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발언권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적극 연대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해야 할 것임.
- 기후재원 범위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단계별 작업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을 상설 위원회에 제안
- 기후재원 규모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바, 현재 OECD 차원에서 진행 중인 공공개입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금 추정 방법론 개발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고려 **KIEP**